

소방학개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①	②	②	①
6	7	8	9	10
②	①	③	④	④
11	12	13	14	15
①	①	④	③	③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②	③
21	22	23	24	25
③	②	③	④	③

1. ③

선지분석

ㄹ. 분진폭발은 가스폭발에 비해 폭발압력은 작으나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과 그을음이 크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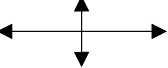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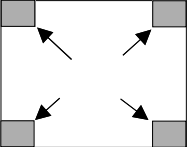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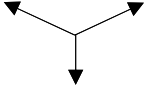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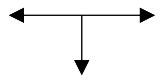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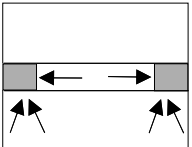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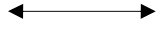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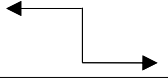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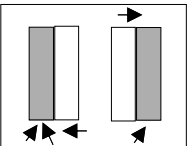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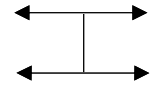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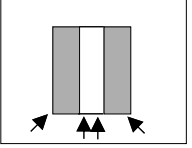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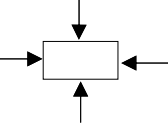
가스폭발과 분진폭발 비교

구분	가스폭발	분진폭발
연소속도	○	-
폭발압력	○	-
연소대의 길이 (연소시간)	-	○
발생에너지	-	○
파괴력	-	○

2. ①

액체연소 중 휘발유 및 경유 등은 액체 자체가 연소하지 않고 가연성증기가 연소한다.

3. ②

구분	피난방향의 종류	피난로의 방향
X형		
Y형		가장 확실한 피난로가 보장된다.
T형		
I형		방향을 확실하게 분간하기 쉽다.
Z형		
ZZ형		중앙 복도형에서 코어(Core)식 중 양호하다.
H형		
CO형		중앙 코어(Core)식으로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인하여 패닉(Panic)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선지분석

- 비상용 엘리베이터(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의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한 전용통로이므로 피난자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피난용 엘리베이터(피난용승강기)는 피난자가 사용할 수 있다.
- 페일 세이프(Fail safe)원칙에 의해 여분 또는 병렬화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유도등보다 입체형유도등을 설치하면 피난방향을 쉽게 알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4. ②

선지분석

- ㄹ. 스프링클러설비는 적상주수 하므로 일반화재(A급 화재)에 적응성 있다.
- ㄱ.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총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①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여 펌프성능시험곡선의 양부 및 펌프의 방수압과 토출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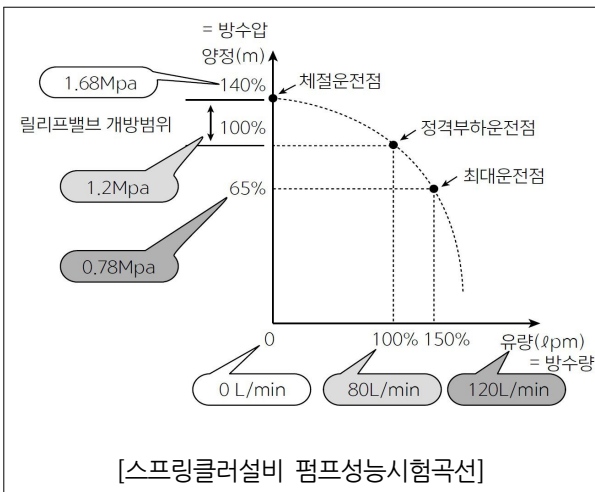
참고

1. 펌프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 분기위치: 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
-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 펌프성능시험기준

소화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②

공동현상(Cavitation)

발생원인	방지대책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높게 한다.
유체가 고온일 경우(배관 내 온도가 높은 경우)	배관 내 온도를 낮게 한다.
펌프의 흡입압력이 액체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펌프의 흡입압력이 액체의 증기압보다 높게 한다.
펌프의 흡입측 수두(양정)가 긴 경우	펌프의 흡입측 수두(양정)를 짧게 한다.
펌프의 흡입측 수두(양정)관경의 마찰손실이 큰 경우(펌프의 흡입관경을 작은 경우)	펌프의 흡입관경을 크게 한다.
펌프의 임펠러속도가 큰 경우(펌프의 회전속도가 큰 경우)	펌프의 회전속도를 작게 한다.

7. ①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재난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8. ③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3세 미만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④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0. ④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다

11. ①

퍼플루오로부탄("FC - 3 - 1 - 10")

- 1의 자리수: 불소(F)의 수 = F10
 - 10의 자리수: 수소(H)의 수 + 1 = 1. H=0
 - 100의 자리수: 탄소(C)의 수 - 1 = 3. C=4
- ∴ 결론: C₄F₁₀

선지분석

- ② CHF₃: 트리플루오로메탄(HFC - 23)
- ③ CHF₂CF₃: 펜타플루오로에탄(HFC - 125)
- ④ CF₃CHFCF₃: 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 - 227ea)

12. ①

선지분석

- ② 윤화현상(Ring Fire)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탱크 벽면에 물분무, 미분무(Water Spray) 등의 설비를 고정포방출설비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 ③ 합성계면활성제표를 저팽창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단백포보다 유류화재에 불리하며 고폽창포로 사용하는 경우 방사거리가 짧다
- ④ 라인프로포셔너 방식은 관로혼합방식으로서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츨리관의 벤츨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이다.

13. ④

- ㄹ.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경우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설치할 수 없다.
- ㅁ.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분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배관을 토너먼트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수계)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배관은 토너먼트로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즉,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분말 소화설비는 토너먼트방식을 할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설비는 토너먼트방식을 할 수 없다.

14.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5) 소방훈련 및 교육
 -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3), 4), 6)의 업무를 말한다]
 -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 관계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의 3), 4), 6), 8), 9)이다.

선지분석

- ①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하며 시·도 정원은 60명 이내여야 한다.
 - 의용소방대 : 시·도, 시·읍·면에 둔다.(군, 구는 없음)
 - 의용소방대임무: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업무를 보조한다.
 - 의용소방대설치: 시·도지사, 소방서장
 - 의용소방대소집: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의용소방대 대장, 부대장임명: 소방서장추천으로 시·도지사 임명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시·도지사, 소방서장
 - 의용소방대 지도, 감독: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의용소방대 정년: 65세
 - 의용소방대 경비: 시·도지사
 - 의용소방대 정원:
 - 시·도: 60명 이내
 - 시·읍: 60명 이내
 - 면: 50명 이내
 -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 50명 이내
 -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 ②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2대와 자체소방대원 10인이 있어야 한다.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 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④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③

- ㄷ. 소방조직의 구조를 기능중심조직, 분업중심조직, 애드호크라시조직으로 구분한다.

- 기능중심조직: 소방관서의 조직형태로서 수행하는 목표에 따라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화재예방, 화재조사 등으로 편성한 전문화된 소규모의 조직을 말한다. 즉, 인력·자원 및 기술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 분업중심조직: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소방서와 같은 하위조직이 증가하여 세분화된 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 애드호크라시조직: 일반 업무는 자기가 속한 부서의 지휘·감독을 받고, 특별한 프로젝트와 같은 업무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인 지휘체계를 갖는 매트릭스조직을 말한다.

- ㄹ.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권자: 시·도지사

선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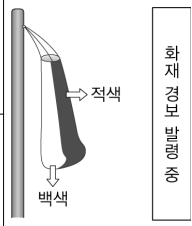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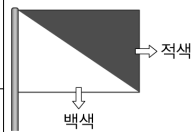

- ㄱ. 소방행정의 특수성은 법제적, 조직적,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업무적 특성에는 현장성, 대기성, 신속·정확성, 전문성, 일체성, 가외성, 위험성, 결과성이 포함된다(예측성은 아님).

- ㄴ. 소방조직의 기본원리 중 계선의 원리는 특정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참여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소속기관의 자라는 것을 말한다.

• 소방조직의 기본원리

- 계선의 원리: 특정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참여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소속기관의 자라는 것을 말한다.
- 계층제의 원리: 소방, 군대, 경찰 등과 같은 조직에서 권한 및 책임에 따른 상하의 계층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업무조정제의 원리: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화 및 분업화되어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통합하여 행동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 명령통일의 원리: 하나의 조직은 한 사람의 상급자에게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분업의 원리(기능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으로 한 사람이나 한 부서가 하나의 주 업무를 맡는 것을 말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 한 명의 상관이 부하를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통솔 가능한 범위는 7~12명이며 비상 시 3~4명으로 더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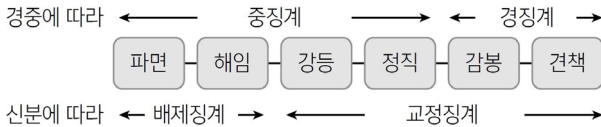
- ㄹ.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신호 방법 종별	타종신호	사이렌신호	그밖의 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 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 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비교

-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16. ②



선지분석

-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중앙에는 내부무 치안국 소방과, 지방에는 경찰국 소방과에서 관장하는 국가 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 소방본부, 119안전센터는 소방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 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 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17. ④

구조대 종류 중 특수구조대는 소방서에 설치하며 화학구조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고속국도구조대, 지하철구조대로 구분된다.

18. ①

무기과산화물은 위험 1등급에 해당되며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참고

수납 시 주의사항

-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 * 수납 시 주의사항 표시: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물기엄금

19. ②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C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참고

질화도란 니트로셀룰로오스 중에 포함된 질소의 농도(%)를 말한다.

20. ③

고층건물, 지하철은 중요화재에 해당되며, 철도는 특수화재에 해당된다.

참고

조사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

- 대형화재
 - 인명피해: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중요화재
 - 관공서, 학교, 정부미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중점관리대상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화재
- 특수화재
 -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 외국공관 및 그 사택
 -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21. ③

목조건축물은 화재최성기의 온도는 내화건축물보다 높다.

22. ②

직쇄탄화수소계열에서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 분자량이 증가하며, 분자구조는 복잡해진다.
- 직쇄탄화수소의 길이가 길어진다.
- 단위발열량이 커진다.
- 비점이 높아진다.
- 인화점이 높아진다.
- 발화점이 낮아진다.
- 연소속도는 감소한다.
- 증기압이 감소한다.
- 연소범위는 좁아진다.
- 하한계는 낮아진다.

23. ③

- 최소 산소농도(MOC) = 산소의 양론계수

$$\left(\frac{\text{산소몰수}}{\text{연소가스의 몰수}} \right) \times \text{연소하한계(폭발하한계)}$$
- 한계산소지수(LOI) =

$$\frac{\text{산소(O}_2\text{)체적}}{\text{산소(O}_2\text{) + 불활성가스(N}_2\text{)체적}} \times 100(\%)$$

선지분석

- ① • 미연소가스의 열전도율이 크면 연소속도가 크다.
 • 미연소가스의 밀도가 작으면 연소속도가 크다.
 • 미연소가스의 비열이 작으면 연소속도가 크다.
 • 미연소가스의 화염온도가 높으면 연소속도가 크다.
- ② 일반적으로 플래임오버현상 → 롤오버현상 → 플래시오버현상이 발생한다.
- ④ 일반적으로 수소가 많으면 백색연기, 탄소가 많으면 흑색(검은)연기가 생성된다.

24. ④

일반적으로 증기비중의 값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그러나 증기운폭발은 증기운을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증기비중의 값이 커야 폭발력이 증가한다.

25. ③

- 옳은 것은 ㄴ, ㄷ, ㄹ, ㅁ으로 4개이다.
- 증류확산은 화염의 길이가 증가하고 난류확산은 화염의 길이는 변화지 않고 일정하지만 화염의 두께(화염의 면적)가 증가한다.
 - 불활성화의 퍼지방법의 종류
 - 진공퍼지: 용기를 진공으로 한 후 불활성 가스주입
 - 압력퍼지: 용기내부를 가압한 상태에서 불활성 가스주입 하여 압력으로 방출
 - 스위프퍼지: 용기의 한 개구부로 불활성가스를 주입하고 다른 개구부로 혼합가스 배출
 - 사이폰퍼지: 용기에 액체(물 등)를 채운 후 액체(물 등)가 배출될 때 동시에 불활성 가스주입
 - 최소발화에너지는 소염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연소속도에 반비례하며 화염온도와 미연소가스 온도 차에 비례한다.
 - 구조의 종류

점화원의 실질적인 격리 (1종 장소)	내압 방폭구조	전폐구조용기가 압력에 견딤
	압력 방폭구조	용기내부에 불활성기체를 압입
	유입 방폭구조	기름(절연유)속에 넣음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가 (2종 장소)	안전증 방폭구조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도 증가
점화능력의 본질의 억제 (0종 장소)	본질안전 방폭구조	정상 또는 사고 시 폭발성이 없다고 입증

선지분석

- ㄱ. 분해폭발은 산화폭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해폭발: 아세틸렌, 에틸렌, 산화에틸렌
 • 분해·중합폭발: 산화에틸렌
 • 중합폭발: 시안화수소

소방관계법규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②	②	③	①
6	7	8	9	10
④	①	④	③	④
11	12	13	14	15
②	④	①	①	②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④	③
21	22	23	24	25
②	③	②	①	④

1. ④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 나. 소방체험관 중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분야	체험실
생활안전	화재안전 체험실
	시설안전 체험실
교통안전	보행안전 체험실
	자동차안전 체험실
자연재난안전	기후성 재난 체험실
	지질성 재난 체험실
보건안전	응급처치 체험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
- 5) 소방기본법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2)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나. 그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4. ③

소방신호

종별 \ 신호방법	사이렌신호	타종신호
경계신호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1타와 연 2타를 반복
발화신호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난타
해제신호	1분간 1회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훈련신호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연 3타 반복

5. ①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다.

-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은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화재조사관
 -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건축·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6. ④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벗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 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특수가연물의 품명 및 수량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벗짚류”라 함은 마른 벗짚·마른 복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용점이 100도 미만인 것
 -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

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
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넙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7. ①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8. ④

-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 둘 것

9.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0. ④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2.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3.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4.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것

11. ②

근린생활시설이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12.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가)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3.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14. 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소화기: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 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5. ②

방염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16. ④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정기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중간정기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17. ③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 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 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 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 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제4류/ 인화성 액체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제6류/ 산화성 액체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18. ③

위험물 품명의 지정은 다음과 같다.

제1류의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요오드산염류 • 과요오드산 •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아질산염류 • 차아염소산염류 • 염소화이소시아눌산 • 퍼옥소이황산염류 • 퍼옥소붕산염류
제3류의 품명	염소화규소화합물
제5류의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의 아지화합물 • 질산구아니딘
제6류의 품명	할로겐간화합물

19. ④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
2.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 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나.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
 -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2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 1)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1. ②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다.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2. ③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0. ③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설치기준
- 가. 밸브없는 통기관
 - 1) 지름은 30밀리미터 이상일 것
 -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러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3. ②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설계업

업종별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2.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 인력: 소방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 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 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 원 이상 나. 개인: 자산 평가액 1억 원 이상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개설·이 전 및 정비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 인력: 소방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 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 원 이상 나. 개인: 자산 평가액 1억 원 이상	가. 연면적 1 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의 공사· 개설·이 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 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의 공사· 개설·이 전 및 정비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 인력: 소방 기술사 또는 전기 분야 소방 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 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 원 이상 나. 개인: 자산 평가액 1억 원 이상	가. 연면적 1 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의 공사· 개설·이 전·정비 나. 위험물제 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의 공사· 개설·이 전·정비

3. 소방공사감리업

업종별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기계 분야	<p>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p> <p>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p> <p>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p>	<p>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p> <p>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리</p> <p>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p>
	전기 분야	<p>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p> <p>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p> <p>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p>	<p>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p> <p>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p> <p>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p>

24. ①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p>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p> <p>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p>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p>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p> <p>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p>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p>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p> <p>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p> <p>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p>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p>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p> <p>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p> <p>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p>
마.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5. ④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60	100	200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60	100	200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200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200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200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60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200		
감리원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2	60	100	200

행정법총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④	③	①	②
6	7	8	9	10
①	①	②	③	④
11	12	13	14	15
④	③	②	②	④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③	③
21	22	23	24	25
③	①	③	④	②

1.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7.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2008.5.15. 2007두26001).

2. ④

선지분석

- ①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8.20. 95누0877). 따라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공적인 의사표명에 대한 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 ② [×]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준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판 2013.12.26. 2011두5940)

- ③ [×] 위법한 선례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하여도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③

악취방지법상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 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22.9.7. 2020두40327).

4. ①

선지분석

- ㄷ. [×] 대법원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20.7.23. 2020두33824)”고 판시하고 있다.
- ㄹ. [×]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 부터 도출되는데, 그 내용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11.28. 2002헌바45).

5.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11.29. 2016두38792)

6. ①

선지분석

- ㄴ. [x]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ㄷ. [x]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불가변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A군수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다.

7. ①

선지분석

- ㄴ. [x]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무효이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ㄷ. [x]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무효는 아니다(대판 2007.7.26. 2005두15748).

8. ②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나,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대판 2010.6.24. 2007두16493).

9. ③

선지분석

- ① [x]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대판 2021.2.4. 2020두48772).
- ② [x] 대법원은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 ④ [x]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부관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기 때문이다.

10. ④

선지분석

- ① [x]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라 할지라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별표] 규정에서 가중적 제재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x]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이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인 3개월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되어진 당초의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 ③ [x] 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11. ④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③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7.8. 2002두8350).

13.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15.2.26. 2014두43356).

14. ②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법률적 근거규정이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행정기본법에 직접 근거하여 부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15.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기업결합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 제1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7호,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 제3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 시정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

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9.12.12. 2018두63563).

16.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행정기관의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도 그 조언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이상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처분임을 인정한다.

17. ③

행정절차법 제40조의 4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형량명령이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안제안에 따라 결정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8.10.12. 2015두50382).”고 판시하고 있다.

18. ②

선지분석

- ① [×]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야간의 대집행실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 ③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6.10.13. 2006두7096).
- ④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대판 1994.10.28. 94누5144).

19. ③

ㄱ, ㄷ, ㄹ, ㅁ은 옳은 지문이다.

선지분석

- ㄴ.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헌재결 2022. 1. 27. 2016헌마364).

20.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7.10. 2013도 11532).

21. ③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20.4.9. 2019두61137).

22. ①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성명정정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듯이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한 甲이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2003.4.25. 2001다 59842).

23. ③

선지분석

- ㄱ. [x]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22.5.26. 2022두34562).
- ㄴ. [x] 대법원은 경원관계의 경우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15.10.29. 2013두27517).”고 판시하고 있다.

24. ④

대법원은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이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실효되면 그 때부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7.11. 2002다48023).”

25. ②

- ㄴ. [x]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은 가능하다. 다만,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
- ㄷ. [x]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